

여야 “夏閑정국 휴가없다”... 민심잡기 경쟁

국정원 사건·NLL발언 공방 속 ‘민생행보’ 쟁결음 새누리, 일자리 창출 성과 점검...경제민주화 병행 민주, 7일 광주서 당원보고대회...시민단체 공조도

여야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7~8월 하한 정국을 맞아 일제히 민생 현장으로 뛰어들기로 했다. 7월에 들어서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경

에만 몰두하지 않고 민생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다. <새누리당>=황우여 대표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은 앞으로 민생현장에 뛰어들 것”이라면서 “당이 앞장서 7, 8월 창조경제 진행 과정과 일자리창

출 과정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병행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각 지역에서 국민이 꼭 목하게 기다리는 일들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미 오는 8월 정책조정위원회별로 외부 인사 중심의 ‘정책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8월말까지 정조위별로 현장 간담회를 집중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함으로써 밀바닥 민심을 보듬겠다는 구상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상임위별 현장방문 계획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총·대선 이후 6월 임시회까지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공약과 민생법안 자료를 홍보물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민주당>=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을(乙) 지키기’를 포함한 민생문제에 깊숙이 파고들어 바닥 민심을 얻겠다는 게 민주당의 7~8월 계획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고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을 여름 민주당에는 휴가가 없다. 한 손에는 민주주의를, 다른 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씩씩하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 민주당은 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난 30일 서울 집회에 이어 오는 7일 광주에서 당원보고대회를 갖는 등 양외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시민단체들과도 자연스레 공조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 주관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민생·정책 투어도 준비 중이다.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6월 국회에서 ‘을 지키기’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자평 속에 전국 각지를 돌며 입법 성과를 홍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장 방문과 병행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실적도 점검해 향후 대어 공세에 활용할 태세다. 애초 지도부 차원의 대규모 버스투어를 검토했지만, 국정원 국조와 NLL대화록 공개 등의 상황속에서 당내 의원 모임과 상임위 중심으로 조를 짜서 움직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을살리기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당 신문고에 접수된 피해사례 현장을 찾아가는 ‘을살리기 경청투어’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가 라운지

박혜자 “국정원 지역감정 조장 실제 밝혀야”



민주당 박혜자 최고위원은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댓글 공작’을 하면서 호남·비하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5·18 왜곡에 앞장선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정과정, 국기문란, 권력찬탈, 지역감정 조장, 역사왜곡의 책임자와 그 배후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가정보원이 유언비어를 통해 지역감정 조장과 역사 왜곡으로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국가 존속 세력, 간첩이나 하는 짓”이라며 “간

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간첩과 같은 행위를 했다니 정말 막장 드라마 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과정이 하나 더 늘어 지역감정 조장, 5·18 역사 왜곡 세력의 실체와 그 배후를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록, 섬주민 차량운임 국가 지원 법안 통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운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섬주민이 소유차량을 이용,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운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도서민에 한해 연안 여객선의 운임을 일부 지원했지만 도서민 소유차량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김 의원은 “현재 승용차량 운임은 진도 서방항~조도 간 1만

7000원, 완도항~청산 간은 4만5000원, 목포항~신안 거제도 간은 7만원에 이르고 있어 섬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해운법 개정으로 인해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경우, 매년 최대 60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내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임대건물 가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 조정된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5년간 계약 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의 상한이 최대 약 20% 상승하게 된다.

임 의원은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상가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의했는데, 그중 일부가 우선 반영되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모든 상가임차인이 권리를 누릴 있게 되었고, 최우선변제액 또한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공청회에서 배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황성욱 고양시의원(왼쪽부터), 남인순 민주당 의원,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일 영남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황주홍 민주당 의원, 임미애 의성군의원. /연합뉴스

민주,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뜨거운 격론’

검토위, 이달중순 의견서 제출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가 3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정당공천제는 공천권의 사유화와 공천비리를 불러오기 쉽다. 지방정치인이 중앙당에 예속되는 부작용도 있다”며 폐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폐지를 약속하기도 한 만큼 이를 실천

하지 않는다면 정치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립대 김민정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여성과 같은 소수자 집단의 정치 진입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좋은 자질을 갖춘 후보의 공천 가능성을 높인다는 순기능도 있다”며 “공천비리나 중앙정치 예속화 등 부작용은 공천과정 투명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윤인순 의원 역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참신한 인재보다는 지역사회의 유지나 전·현직 단체장 등 기득권층이 선거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며 존치 의견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황주홍 의원은 “각종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60~70%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토위원회 위원장인 영남대 김태일 교수는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얽힌 문제여서 쉽게 합의가 이뤄질 상황이 아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들을 계속 취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토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찬반 양쪽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원 사건’ 규탄 광주서 시국회의 결성

야당·시민사회·종교·학계 등 참여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 관련 시국선언이 광주·전남지역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종교·학계 등이 참여하는 시국회의가 결성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광주시장 등 제정당과 광주지역 시민사회·여성·진보·학생·학계 등은 4일 쉽게 합의가 이뤄질 상황이 아니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들을 계속 취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국회의는 앞으로 촛불집회 등 장외집회에 서명운동, 거점별 1인 시위 등을 펼칠 예정

이다. 광주 북구의회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 최초로 장외집회에 돌입하기로 했다. 북구의회는 3일 오후 6시부터 북구의회 앞 광장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개최하고 11일까지 북구 각 지역을 돌며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남 여수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3일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의견의 해**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2013년 10월 1일 OPEN

3.3m²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평×200만원 = 임대료 3억740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파격적인 임대료가!

지하2층 ~지하1층 수영장(사우나, 헬스) 2294평×80만원 = 5억1335만원	지상2층 PC방 203평×200만원= 4억60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평×90만원 = 3억6720만원	지상2층 레스토랑 166평×200만원 3억320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평×500만원 = 42억250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평×150만원 12억8100만원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평×500만원 = 1억1천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평×500만원 = 1억1500만원	지상2층 ~3층 골프장 906평×150만원 13억5900만원
지상1층 약국 69평×1000만원 = 6억9천만원	지상2층 일식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평×500만원 = 2억2천만원	지상3층 ~4층 영화관 (입점확정)
지상1층 롯데리아,엔젤리너스 540평×300만원 = 16억2천만원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텐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